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 6. 10 ()		

	2008. 6. 9()		
	(368-4413)	02-368-4431	18

: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2008년 6월 10일(화) 서울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은퇴이후의 삶과 노후소득대책”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1 :
< : (Sarah Harper) >

사라 하퍼(Sarah Harper) 옥스퍼드대 교수는 25개국 4만 여명을 대상 (은퇴를 앞둔 세대(40~59세) 및 은퇴를 한 세대(60~79세)를 대상으로 글로벌 리서치를 한 결과, “유럽국가 사람이 아시아국가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노후 및 은퇴이후의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발전국에서는 약 2/3 정도의 사람이, 경제후진국에서는 1/4 정도의 사람이 후손들에게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삶에 대한 지혜나 지식 등을 후손에게 물려주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 리서치한 결과, 노후소득, 질병 및 장애에 대한 기대수준은 매우 낮으며, 저축 및 개인연금이 은퇴후 노후소득의 주요원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사람들은 은퇴를 한 사람이 은퇴를 앞둔 사람보다 노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이 특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2 :
< : HSBC (Luzia Hung) >

루치아 흥(Luzia Hung) 홍콩 HSBC 퇴직연금 총괄책임자는 홍콩의 경우, 19 개 운용기관이 240 여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콩 퇴직연금제도(MPF: Mandatory Provident Fund)를 운용하고 있으며 상위 10 개의 MPF 운용기관이 92.3%의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입대상 90%이상이 중소기업이었으며, 퇴직연금 관련 규제가 매우 복잡하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감독기관 및 기업의 인식부족 등으로 제도초기 3년간은 MPF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루치아 홍(Luzia Hung)은 실제로 홍콩 퇴직연금제도(MPF)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입자 상당수가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직접선정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수수료보다는 운용기관의 브랜드 및 전문적 서비스를 고려, 운용기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홍콩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로 자발적 납부비중의 증가, 개인연금 및 퇴직관련 상품서비스의 도입, 가입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추가, 가입자에 대한 운용기관 선택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langle \mathbf{r} \rangle = \frac{1}{N} \sum_{i=1}^N \mathbf{r}_i$$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의 고령화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현재 35 세 근로자가 평균여명까지 생존시, **고령화리스크 규모**[=소비지출(노후생활비+노후의료비)-연금소득]는 3 억 6500 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노후소득대책으로 개인의 고령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고령자의 노후생활 및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38.2%가 전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부부가구 월평균소득은 약 121 만원에 지나지 않고, 노후생활비의 34%를 전적으로 자녀, 친척 등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노후생활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 및 일본의 가계는 고령화에 대비, 보험 및 연금위주로 금융자산의 비중(2007 년 기준 가계금융자산중 보험·연금 구성비: 한국 23%, 미국 31%, 일본 26%)을

증대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식위주로 금융자산비중을 증대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고령화리스크에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달리 퇴직,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설계, 기업역할, 고용정책, 연금제도 등 4 개 측면에서 고령화리스크 대응차원의 종합적 노후소득보장 대책마련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노후설계 측면에서 개인의 은퇴설계를 통한 적절한 노후자금확보가, 기업(보험회사)역할 측면에서 고령자 리스크관리자로서의 노후소득대책 관련 경영전략 수립이, 고용정책 측면에서 노인경제활동대책을 통한 은퇴이후의 노후소득기반 마련이, 연금제도 측면에서 사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재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노후소득대책은 불임참조)

- <불임> 1.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2. 홍콩의 퇴직연금시장
3. 고령화리스크와 노후소득대책
4. 국제컨퍼런스 토론내용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발표자: 영국 옥스퍼드대의 사라 하퍼(Sarah Harper)교수

□ 25 개국 4 만 여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서치를 기대, 선택, 준비, 상속 등 4 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은퇴를 앞둔 세대 (40 세~59 세) 및 은퇴를 한 세대(60 세~79 세)를 대상으로
리서치 실시

□ 기대

- 한국은 노후소득, 질병, 장애 대비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노동인구의 3 분의 1 정도만 은퇴후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특징적인 것은 한국의 경우 은퇴를 한 사람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보다 노후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선택

-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족 및 개인이, 유럽에서는 정부 및 개인이, 북미지역에서는
개인이 노후소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 한국은 은퇴시기에 가까워 질 수록 4 가지 노후소득 요소가 바뀌고 있음
(가족, 개인, 정부, 직장 순 → 개인, 가족, 정부, 직장 순)

□ 준비

- 전 세계적으로 저축이 주요한 노후소득 원천이며 한국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원천은 저축 및 개인연금임

- 경제가 발달한 국가의 고소득 가정은 다각화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성 및 저소득 가정의 남성은 단일 노후소득원에 의존함.

□ 상속

- 전반적으로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보다 삶에 대한 지혜나 지식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아시아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재산을 상속해 주기를 원함.
- 경제가 발전해 감에 따라 가치관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경제 발전국 : 약 3분의 2 정도가 후손들에게 삶에 대한 지혜나 지식을 남겨 주길 원함.

홍콩의 퇴직연금시장: MPF

발표자: 홍콩 HSBC 의 루치아 홍(Luzia Hung) 퇴직연금 총괄 책임자

□ 홍콩의 퇴직연금제도

- 홍콩의 퇴직연금제도(MPF)는 2000 년 12 월에 도입되었으며 대상은 18 세~65 세임.
 - 60 일이상 근무한 근로자(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 건설업 및 요식업계의 일용직
- 운용기관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며 MPF 감독당국에 등록
 - 원금보장형 펀드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펀드편입비중 선택 가능

□ 홍콩의 퇴직연금시장

- 19 개의 기업(운용기관)이 240 여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MPF 제도를 제공
 - 운용기관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대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상위 10 개의 MPF 운용기관이 전체시장 점유율 92.3%
- 2007 년 12 월 현재 자산규모는 HK 2647 억불

□ 초창기 문제점

- 감독기관 및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에 익숙하지 못하였다는 점, 가입대상의 90%이상이 중소기업이었다는 점, 관련규제가 복잡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초기 3년 동안은 MPF에 대해 매우 부정적

□ 8년간 감독당국 및 업계의 노력

- 감독당국: 실행강화, 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업계의견수렴, 가이드라인 배포, 절차간소화를 위한 법령 개정, 펀드평가, 수수료, 연례운용 보고서 등 관련 정보의 공시 개선
- 업계: 자발적 납부독려, 시장니드 부합을 위해 새로운 제도 및 펀드출시, MPF 가입자를 대상으로 투자세미나 개최, 기금납부, 자료수령 및 배포 등을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

□ 최근 설문조사 결과

- 홍콩 MPF 제도가입자를 대상으로 50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 2008년 1월 실시하였으며 홍콩 대학 등이 주관
- MPF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MPF 적립금이 연금수령후 7.6년이 지나면 고갈될 것으로 생각
 - 3분의 1 정도가 펀드편입비중을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응답이 약 90%
 - 10명중 4명은 MPF 연금제도 이외에 노후소득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없는 상황임.
 - 응답자의 80%가 스스로 운용기관을 선정하기를 원하고 있음.

□ 향후과제

- 자발적 납부비중 증가, 개인연금 및 퇴직관련 상품 및 서비스 도입
 - 가입자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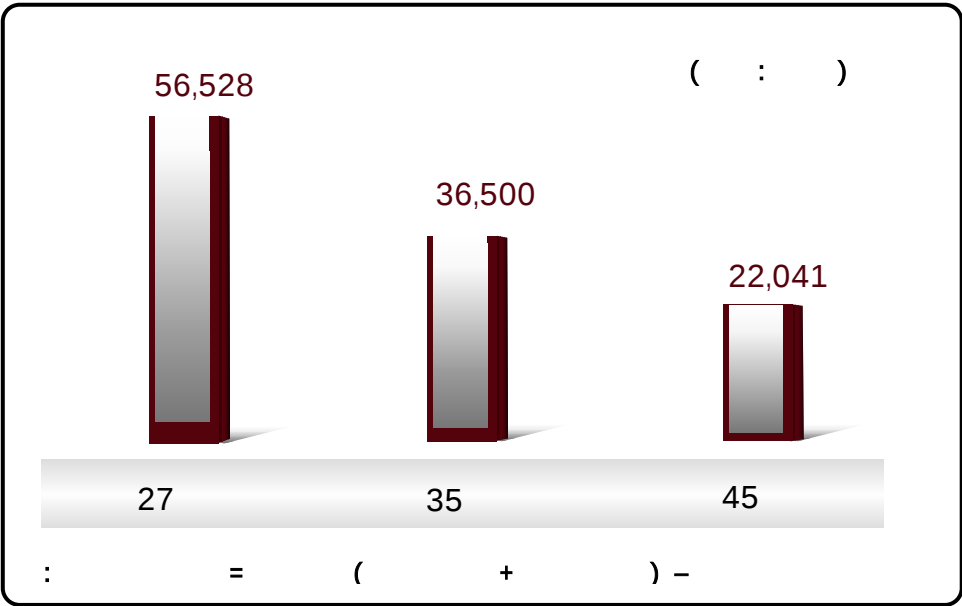
- 가입자에게 운용기관 선택권 부여, 호감도 및 고객 정착율 제고, 투자 수익률 및 우수한 서비스 제공 등

고령화리스크와 노후소득대책

발표자: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재무연구실장)

□ 고령화 리스크와 노후소득 대책 필요성

- 고령화의 진전으로 개인에게는 생존, 건강, 자산 리스크 등과 같은 고령화 리스크 증대 예상
 - 개인의 고령화 리스크는 기업, 정부에 각각 재무리스크, 재정리스크로 전가
- 개인의 고령화리스크를 산정결과(근로자 대상, 60 세 기준 평균여명 추정), 35 세가 은퇴후 평균여명까지 생존시는 3 억 6500 만원의 고령화리스크 발생
 - 이에 따라 노후소득대책을 통한 생존리스크 대응 절실



□ 고령자의 노후생활 현황 및 실태

- 노인부부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121 만원이며 이전소득이 노인의 주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남.
- － 생활비마련방법: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 및 친척지원의 증가(2007 년 기준 약 34.1%) 뚜렷.
- － 노인의료비추이: 2006 년 노인의료비의 전년대비증가율(22.1%)은 전체 의료비 증가율(15.2%) 상회
- － 노후준비방법: 10 명중 4 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60 세 이상 : 57.8% 미준비)
- － 중고령자의 노후생활니드 : 65 세 이상 노인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수준
- 미일 등은 고령화 대비하여 보험/연금비중을 증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주식중심의 금융자산 보유
- － 2007 년 가계 금융자산 구성비(보험 및 연금) : 한국 23.0%, 미국 31.2%, 일본 26.2%
- 고령자의 노후생활실태 등을 종합한 결과, 노후생활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령자를 위한 노후소득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가

(단위:%)

금융자산	한국		미국		일본	
	2002	2007	1990	2007.6	1990	2006
현금·예금	49.2	36.4	22.6	15.1	48.6	50.8
보험·연금	21.4	23.0	25.4	31.2	20.8	26.2
채권	3.3	2.0	12.0	7.3	6.3	2.8

수익증권	4.9	9.9	3.5	11.6	3.4	4.5
주식·출자금	14.4	21.3	34.3	31.7	17.3	12.7
기타	6.8	7.3	2.2	3.2	3.6	3.0

주: 1)일본은 회계연도 기준

2) 미국은 뮤추얼펀드 기준

자료: 각국 자금순환표 및 한국은행(2008.4)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국제비교

- OECD 주요국은 고령화 리스크 대응차원에서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거나 공적연금 일부를 적용제외 시키고 있는 실정임(영국 및 일본: 적용제외, 네덜란드 및 덴마크: 일부대체)
- 즉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고 있는 추세임.
- － 사적연금 발달→공적연금 의존도 공감→ 노년층 부유도 향상
 - 호주 : 사적연금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취약도 낮게 유지
- 사적연금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 필요성은 근로자 대상으로 적정 및 실질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나타남.
- － 적정소득대체율: 근로자의 소득 및 소비 패턴을 감안시 적정한 소득대체율은 65.0~75.6% 수준
- － 실질소득대체율 : 현실적인 근로기간(28 년), 은퇴기간(24 년)을 고려시, 근로자의 사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2.3%수준
- 따라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감소하고 개인 및 시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적정(명목) 소득대체율		실질(현실)소득대체율 (연금가입 28년 기준)
	World Bank	우리나라	
개인연금(3층)	20%	65.0 ~75.6%	9.7%
퇴직연금(2층)	60%		12.6%
국민연금(1층)			

주: 1) 개인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월 20만원 납입을 기준으로 산정

2) 실질소득대체율은 개인, 퇴직, 국민연금을 직전 평균소득으로 환산한 값임

□ 고령화 리스크 대응과 노후소득대책

- 고령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후설계측면, 기업역할측면, 고용정책측면, 연금제도측면 등 모두를 고려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노후설계 측면에서의 대책
 - － 개인의 고령화 리스크 대응을 위한 사전적 노후설계 철저
 - 적정소득대체율, 근로기간, 은퇴기간을 고려한 적정 노후자금계획 수립
 - －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 체계화
 - 연금소득을 고려한 추가적인 노후소득대책 마련
 -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 및 연금중심의 금융자산비중증대
- 기업(보험회사)역할 측면에서의 대책
 - － 건강, 소득, 자산정도 및 자산관리, 의료니즈에 따른 은퇴시장 세분화
(시니어계층 및 예비시니어 계층별 노후서비스제공)
 - － 개인 및 변액연금을 주축으로 한 저축 및 투자서비스강화

- 상속 및 증여를 포괄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라이프사이클별 재무설계 서비스, 다양한 역모기지상품 개발 등

◦ 고용정책 측면에서의 대책

- 노인 일자리 마련, 취업알선 등 사후적 노후소득대책강화
-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을 통한 노인의 가처분소득 향상
- 노인직업훈련강화, 고령자재취업시 인건비 및 세제혜택강화

◦ 연금제도 측면에서의 대책

- 특수직역연금 및 국민연금제: 특수직역연금의 합리적 개선(국민연금 + 퇴직연금+DC 형 저축계좌형태의 3 층 노후보장체계로 전환), 공사 연금간 유기적 역할분담체계 마련(국민연금 이원화,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 대체검토)
- 개인연금제: 저소득계층 연금가입에 대해 실질수익률이 향상되도록 현행 소득공제방식의 재검토, 운용자산 운용방법의 다양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연금납입액 소득공제 허용, 중도해지시 불이익 해소방안 모색 등
- 퇴직연금제: 퇴직연금전환대책 강구(연금소득공제확대, 수급권보호장치 마련, 중간정산제 및 중도인출제 폐지, 연금가입의무화, 법정퇴직금제 폐지), 질적규제중심 운용규제로 전환, 미국식 DC 형 도입으로 퇴직연금활성화, IRA 제도의 활성화(자영업자, 전국민으로 가입대상확대, IRA 에 근로자 추가적립허용 등)

국제컨퍼런스 토론내용

1. 김대익 팀장(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OECD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 2018 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개인, 기업 및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고령화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가 급속히 압축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 노후보장체계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중심의 보장체계로 구분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각 나라의 사회안전망의 구축정도, 가계의 자산축적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노후보장 체계를 가져가고 있으며, 특히, 사적중심의 노후보장 체계는 가계의 부의 축적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의 경우, 가계의 소득수준과 부의 축적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은퇴이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 소득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함
 - 노후 소득에 대한 준비는 실물자산(역모기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금융자산을 통하여 이루어짐

- 주요 질의사항
 -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노후소득준비로 인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영향

2. 김종철 과장(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취약성 및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됨
 - 최근에는 1 층 보장체계인 공적연금의 재정위기에 따라 2 층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2008 년 4 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3 조 3,772 억원으로 다음과 같은 저해 요인으로 인하여 제도 확산은 미흡한 수준임
 - 노측과 사측의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부족 및 현행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완결성은 퇴직연금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비율을 60/100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퇴직보험제도에는 적용되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점, 기존 퇴직금이나 퇴직보험제도에 비하여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등
-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2 차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의 역할 이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과제의 추진이 필요함
 - 첫째, 지급보장 강화를 위해 ① DC 형뿐만 아니라 DB 형의 원리금보장 금융상품까지 예금자 보호 적용, ② DB 형의 60/100 이상 사외적립비율 상향조정, ③ 퇴직연금 도입후 규약에서 약정한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방안 강구 등을 검토

- 둘째, 퇴직금 내지 퇴직보험과 퇴직연금 간의 인센티브 격차를 높여 퇴직연금의 선택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함
 - － 퇴직연금 선택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식과 더불어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예,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내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의 단계적 축소.폐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
- 셋째, 근로자와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 및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선택권한 확대
- 넷째, 퇴직연금 적용대상의 확대

3. 이봉주 교수(경희대학교)

- 급격한 고령화, 국민연금의 재정적자의 확대 등을 고려할때,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제도의 확대를 강화하고, 적정 퇴직급여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짐
 -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안전망, 기대에 못 미치는 퇴직연금의 도입 성과, 노후 보장을 위한 가족의 전통적 역할 감소는 ‘개인연금 및 저축’을 통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봄
 - －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개선이 중요함
- 개인연금 측면에서, 소득공제방식 재검토, 자산운용방법 다양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연금납입액 소득공제허용, 중도해지시 불이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동의함
 - 적격개인연금상품의 수익률은 실질금리 측면에서 미미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률마저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 페널티로 인해 중도해지도 여의치 못하게 하고 있어 오히려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축적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함.

□ 퇴직연금제도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적 수단 활용 필요

- 300 만원의 소득공제 추가 확대 및 단기적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손비인정의 폐지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도모
- 법정퇴직금제를 폐지하고 연금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함

□ 저축측면에서, 장기투자를 통한 노후준비를 위해 “펀드수수료의 합리화” 및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판매회사 및 운용회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규제환경 조성

- 우리나라의 경우, 펀드수수료가 국제적으로 볼 때 너무 높은 수준이며, 판매사는 보수만 챙기고 서비스는 미흡한 현상이 많이 관찰되고 있음
- 보험권에서 온라인보험을 통해 직접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과 같이 ‘펀드직판제’ ‘펀드슈퍼마켓’ 등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환경 조성

□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은퇴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사회체제가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임금피크제는 불가피함

4. 이은영 수석연구원(삼성금융연구소)

-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자 중 근로자 비중이 높고,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 사이의 노후에 대한 태도와 준비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현 은퇴세대의 자구적 노후준비의 미충분함과, 노후세대에 대한 부담문제가 세대간 불평등 이슈의 하나로까지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 삼성금융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과거에 비해 노후대비를 시작하는 연령이 빨라지고 있으며, 개인의 저축행동에 있어 목적성이 뚜렷해지고, 노후소득구성 중 사적 이전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낮아지고 있음

□ Hong Kong 의 퇴직연금제도 시행 경과에 대한 분석은 이제 도입 3 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전체적 삼층보장의 틀 속에서 그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은퇴설계에 대한 교육이 퇴직연금사업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는 한계가 있음
-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닌 개인의 재무목표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투자교육이나 경제교육 맥락에서 보다 포괄적인 은퇴설계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사적 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제도 보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2007 년 국민연금개혁의 단행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된 것에 반해 급여수준 인하로 현 비은퇴가구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부담이 문제로 남게 되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층보장체계 구축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핵심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활성화 조치는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못하고 있음
- 영국의 적용제외제도(Contracting-out)를 포함하여 공적 연금 재정부담의 완화와 사적 연금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외국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